노동자 연대

wspaper.org

Workers' Solidarity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제442호 | 2022년 11월 26일 ~ 12월 2일 | 값 1,000원

윤석열 퇴진 운동
2~5, 8~10면

한미일 정상회담과 북한 새 ICBM 발사
7면

이란 반정부 시위
12, 13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11면

서민 생활고 악화
14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G20 정상회의에서 세를 과시한 신흥국들
6면

화물연대 파업 15~16면

윤석열 퇴진 운동 지지자는 민주당 2중대가 아니다

관련 기사 4~5면

윤석열: "[MBC, YTN, TBS 등등] 언론은 국익 위해 봉사해야"

21세기 보도지침인가

"확인하기 힘든 말('바이든'/'날리면')을 자막으로 만들어 무한 반복했습니다. 이게 악의적입니다."

"[가짜뉴스로] 한미동맹을 노골적으로 이간질했습니다. 이게 악의적입니다."

"[광우병 소고기 보도, 월성 핵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보도 등] 국민 불안을 자극하는 내용들을 보도했지만 모두 가짜뉴스였습니다. 이게 악의적입니다."

11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실이 발표한 "MBC가 악의적인 이유 10가지" 중 일부 내용이다. 대통령 비판 좀 했다고 대통령실이 직접 쌍심지를 켜고 달려드는 모습에서 윤석열 정부의 권위주의를 볼 수 있다. 1980년대에 언론사마다 보도지침을 하달해 보도의 "가(可), 불가(不可)"를 결정하고 보도의 방향이나 세부적인 표현까지 통제했던 전두환 정권이 떠오른다.

지난 9월 MBC가 윤석열의 해외 순방 당시 비속어와 "바이든" 발언을 최초 보도한 이후, 윤석열은 MBC를 집요하게 물고늘어졌다.

사진 출처 언론노조

MBC가 취재 전용기에서 내려올 게 아니라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한다

정부는 10월부터 MBC 세무조사에 들어가 최근 520억 원에 이르는 추징금을 물렸다. 추징금 액수는 이례적으로 곧장 유출됐다. 언론사 세무조사는 군사 정권 시절뿐 아니라 이명박 등 많은 정부들이 빼 들어 온 비판적 언론 압박 명분이자 길들이기 수단이다.

11월 18일 윤석열은 MBC 기자단의 취재 전용기 탑승을 거부했고, 이에 대해 MBC 기자가 약식 회견('도어스테핑') 자리에서 따지자 대통령실은 이 기자를 징계하려고 출입기자단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기자단이 이를 거부하자 윤석열은 아예 약식 회견을 중단해 버렸다.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상훈은 공개적으로 삼성 등 언론 광고주들에게 'MBC 광고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 박성중은 MBC 박성제 사장과 보도국장, 디지털뉴스국장, 취재 기자 1명을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상의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또, "언론노조 출신 경영진이 문제"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MBC 사장 교체를 압박하고, MBC를 민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비판 언론에 대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재갈 물리기는 MBC만 노리는 게 아니다.

국민의힘은 YTN이 "친민주당 방송"이라고 비난한다. 국세청은 5년마다 하던 세무조사를 4년마다 하겠다며 올해 YTN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유자산 매각 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한전KDN의 YTN 지분 매각(민영화)을 포함시켰다.

감사원은 KBS 특별 감사 기한을 연장했다. 서울시의회 과반을 차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시의 TBS 지원을 중단하기로 의결했다. 이것은 서울시장 오세훈의 선거 공약이기도 했다.

퇴진 지지 정서 억누르기

윤석열이 정부 비판 보도에 이토록 신경질적으로 나오는 것은, 그의 속이 좁쌀만 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물론 그가 속좁은 인간인 것은 분명하지만 말이다.

윤석열이 언론 ·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결국 그러한 자유의 본질이자 핵심인 서민 대중의 비판과 저항을 억누르려는 시도이다.

윤석열은 집권 반년 만에 심각한 정치 위기에 직면했다. 대장동 수사 등을 통해 민주당에 부패 이미지를 덧씌워 이태원 참사 정국의 위기를 돌파하려고 한다.

윤석열은 제1 야당과 비판 언론을 압박하면서 안보 · 헌법 수호 운운했다. 얼토당토않게 민주당을 "주사파"로 왜곡 · 비방하고, 언론의 사명은 진실이 아니라 국익이라는 것이다.

사진 출처 대통령실

비판 언론 틀어막기가 마음처럼 안 되자 약식 회견을 중단해 버린 윤석열

'국익 앞에 복종' 식으로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은 권위주의적인 언론 압박이다.

특히, 정부를 비판 · 반대하면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역대 우파 정부들이 애용했던 수법이다.

윤석열 정부의 이런 비판 언론 탄압은 보통 사람들의 정치적 · 정신적 삶에서 비판 의식을 위축시키려는 것과 관련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통해 경제 위기의 고통 전가에 맞선 저항을 약화시키고 싶어 한다.

물론 민주당은 윤석열의 비판 언론 길들이기를 규탄하고 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언론중재법('가짜뉴스', 명예훼손을 근거로 언론 처벌을 강화하는 법) 시도했던 장본인'이라고 반박한다.

대선 때 언론중재법을 반대해 놓고 집권하자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할 말은 아니다.

그러나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리다' 식인 민주당의 대응이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윤석열의 언론 길들이기 시도에 제대로 맞설 수 있는 힘은 윤석열 퇴진 운동의 확대와 노동자 투쟁의 고양에서 나올 수 있다.

김승주

임기 초부터 대통령 퇴진 요구하면 역풍 분다?

지난 주말(11월 19일)에 윤석열 퇴진 집회가 대규모로 열리자,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은 일제히 "취임 6개월 된 대통령에게 탄핵, 퇴진 … 대선 불복"이라며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

이들은 특히 이날 연단에 오른 민주당 의원 7명을 공격했다. 그러나 정작 이들 중 유정주 비례의원만이 (좀 덜 분명하게나마) 퇴진을 주장했을 뿐이다. 나머지 의원들은 국정조사 등 민주당의 어젠다로 퇴진 집회 참가자들을 이끌기 위해 온 것이었다.

그래서 본지는 집회 주최 측이 이들의 집회 참가 사실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연단에까지 세우는 것은 참가자들의 투쟁 목표를 명확히 하기에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8~10면에 실린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를 보시오.)

윤석열이 취임한 지 6개월이나 지난 마당에 "대선 불복"이라는 말은 얼토당토않거니와, 그런 비난은 민주주의에 대한 우파의 천박한 의식을 보여줄 뿐이다. 선거에서 당선된 대표자가 추진하는 것은 입닥치고 무엇이든 따라야 한다는 건가?

영국 총리 리즈 트러스도 취임 45일 만에 대중의 커다란 불신을 받으며 사임했다. 아르헨티나 대중은 2001년 12월 한 달 만에 대통령을 무려 3명이나 갈아치웠다.(결국, 네번째 대통령인 에두아르도 두알데가 이듬해 1월 2일 취임해 2003년 5월 24일까지 재임했다.)

취임 6개월 만에 서울 도심에서 수만 명이 참가하는 윤석열 퇴진 집회가 매주 열린다는 것은 그 짧은 시간에만도 윤석열의 악행이 첩첩이 쌓인 결과이자,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더 끔찍한 일들의 예고편이라는 걸 대중이 직감했기 때문이다. 생계비 위기 악화, 재정 긴축, 부자 감세, 보건 · 사회서비스 후퇴, 법 질서 앞세운 권위주의 강화, 나토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이태원 참사 등.

지금도 윤석열은 고유가 · 고물가 고통 전가에 맞서 투쟁에 나선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엄정 대처" 운운하며 협박하고 있다.

사진 이미진

11월 19일 퇴진 집회 윤석열에 대한 반감이 만만찮은 규모의 퇴진 운동으로 표현되고 있다

"대선 불복"

그런데 민주당은 이런 얼토당토않는 "대선 불복" 비난 앞에서 움찔한다. 민주당 주류는 "[퇴진 얘기가] 너무 빨리 나오면 오히려 역풍 맞는다"며 '강경파' 의원들을 단속해 왔다.

민주당은 지금 국면을 국정조사로 전환해 국회에서 여당과의 협상을 통해 이태원 참사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한다. 물론 자신이 전망하는 방향으로 이끌려고 국민의힘과 경쟁하고 때로 큰소리 치지만 말이다.

> 취임 6개월 만에
> 수만 명이 참가하는
> 퇴진 집회가 매주 열리는 것은,
> 그 짧은 시간에만도
> 윤석열의 악행이
> 첩첩이 쌓인 결과다.

민주당은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계급 등 서민층에 전가하는 일에 협조해서 기업의 이윤을 보호하는 데 기본적 이해관계가 있는 친자본주의 정당이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심각한 경제 위기 속에서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노동 개악 등이 마냥 지연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최근 민주당에 복당한 전 국정원장 박지원이 "선거 때는 치열하게 싸웠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야당의 태도"라고 한 이유다. 지금 이 와중에도 민주당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집시법 개악안을 놓고 국민의힘과 합의했다.

선거 역풍?

'역풍'론에는 대개 선거적 계산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국힘과 민주당 사이의 중도층이 윤석열에게 등을 돌렸지만, 아직 좌파 정당은 물론이고 민주당으로 수렴되는 상황도 아니다.

그래서 친민주당 언론은 섣불리 대통령 퇴진을 요구해 중도층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며 점차 세를 넓히는 것이 다음 선거에서 민주당에 득이 될 거라고 조언한다. "무리한 퇴진, 탄핵 주장은 내년 보궐선거, 내후년 총선에서 역풍 맞을 수 있다."(11월 23일 자 〈한겨레〉 백기철 편집인)

이런 주장은 대중의 생계비 고통과 불만이 저변에 있는 퇴진 운동의 전진보다 선거에서의 득실이 중요하다고 보는 선거 중심적 태도다. 대중의 절박한 당면 요구를 몇 년에 한 번 있는 선거 일정에 맞추라는 것이다. 게다가 선거로 당선된 자들은 공약을 대부분 저버린다.

그런데 선거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다음 총선에서 윤석열의 지지율 하락과 민주당 · 정의당 등 야당의 반사이익이 예정돼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윤석열에 대한 반감과 불만이 모두 퇴진 운동으로 수렴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운동은 우파들이 히스테리를 부릴 정도로 만만찮은 결집을 이뤄 왔다. 운동이 커질수록 중도층에 대한 견인력도 커지고, 윤석열에 대한 반대도 더 강력해질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운동을 확대하는 데 나서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자신이 제1 수혜자가 된 박근혜 퇴진 운동에서도 막차 타고 와서 첫 차 타고 떠났다.

문제는 이런 '역풍'론을 비단 민주당뿐 아니라, 정의당 같은 온건 좌파도 은근히 공유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아직은 이 운동이 충분히 크지 않다고 보고 선거 때까지 차근차근 실력을 쌓자고 생각하는 좌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지가 강조했듯이 총선까지 시간이 우리 편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본지 441호 '윤석열 심판론의 문제: 그때까지 시간은 우리 편이기만 한가?'를 보시오.)

정치든 운동이든 모두 그것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끌려는 살아 움직이는 인간들의 투쟁의 장이다. 그래서 흐름이 변하는 것이다. 이러저러한 계기, 실수, 우연 등으로 우리 측이 공격의 주도권을 쥘 때도 있지만 그 반대 흐름도 생겨난다.

윤석열에 대한 반감이 만만찮은 규모의 퇴진 운동으로 표현된 지금, 이 기회를 놓치는 것이 오히려 윤석열에 의한 역풍을 부를 수 있다.

성지현

윤석열 퇴진 집회가 이재명 방탄용 집회?

김문성

윤석열 퇴진 집회가 이재명 방탄용 집회라거나 민주당을 이롭게 하는 집회일 뿐이라는 주장이 있다. 국민의힘이 그렇게 주장하는데, 좌파 일각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윤석열 퇴진 운동과 민주당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우선, 윤석열 퇴진 요구는 민주당의 입장이 아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퇴진 요구와 민주당의 요구는 모순된다.

윤석열 퇴진 집회 주도자들이 민주당 진보파와 친밀한 관계인 것은 맞지만, 현 시점에서 그들은 민주당 진보파와는 달리 윤석열 퇴진이라는 급진적 요구를 제기하며 운동을 이끌고 있다.

민주당 진보파 의원들은 몇 명을 제외하면 거리 운동에 동참하지 않고 원내 활동만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렇게 국회 내에서 국민의힘과 협상하는 것을 수단으로 삼는 반면, 퇴진 집회에는 주로 40대의 서민층이 참가하고, 집회 규모가 커질 때는 생전 처음 정치 운동에 참가하는 듯한 젊은 직장인과 대학생들이 많이 참가하고 있다. 운동의 참가자가 어떤 사회 집단인가하는 점은 그 운동의 성격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윤석열 자체가 재난

퇴진 집회 참가자들은 윤석열 자체가 재난이라고 외쳤다.

11월 19일 집회가 한 달 전 전국 집중 집회보다 더 커진 것은 반윤석열 정서가 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물론 이태원 참사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이 집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 자체가 보통 사람들에게 경제 위기 고통을 전가하고 참사의 비극을 재현할 것이므로 반드시 끌어내려야 한다는 김승주 씨의 연단 발언(링크)에 "촛불 환호가 뜨거웠"던 것에서도 집회 참가자들의 정서를 느낄 수 있다.

이런 정서는 퇴진 집회 곳곳에서 확인된다.

가령 19일 퇴진 집회 주최 측이 나눠 준 팻말의 한쪽 면에 적힌 구호는 "민생파탄 정치보복 평화파괴 친일매국, 윤석열 퇴진!"이었다. 워딩의 일부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워딩이 담고 있는 내용 자체를 좌파가 반대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또한 일부 참가자들은 민주노총과 정의당이 퇴진 집회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점들은 집회 참가자들의 목적이 민주당 재집권을 뛰어넘는 것임을 보여 주는 사례들이다.

이는 2004년 보수 정당들에 의한 노무현 탄핵 직후, 노무현의 개혁 배신에 비판적임에도 우파의 반민주적 탄핵에 반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탄핵 반대 집회에 나왔던 일을 떠오르게 한다.(이 사례를 통해 대중의 반윤석열 정서가 단순 민주당 지지로 축소시키기에는 더 급진적인 면이 있음을 상기코자 한다.)

사실, 19일 민주당의 입장에 충실한 집회는 윤석열 퇴진 집회가 아니라 같은 시각 여의도에서 열린 집회였다. 개혁국민운동본부, 밭갈이운동본부, 21세기조선의열단, 민주진보유튜브연대가 "진실 규명 국정조사 · 특검 즉각 실시하라"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고작 수백 명이 참가한 이 친민주당 집회에서 주최측은 '민주당에게는 막연한 퇴진 요구보다 국정조사가 더 도움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이 집회에서조차 윤석열 퇴진 구호를 외친 발언이 많은 박수를 받았다.

사진 이미진

윤석열 퇴진 요구와 민주당의 요구는 모순 퇴진 집회 참가자들이 민주당보다 더 급진적이다

민주당의 꾀죄죄함

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이재명 턱 밑까지 들어왔는데도, 저항도 제대로 안 할 뿐 아니라 소속 의원들에게 퇴진 집회 참가 자제를 요구했다.

그리고 11월 23일 민주당은 내년 예산안 통과 직후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했다. 본지가 경고한 대로 국민의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점 때문에 국정조사 실시 합의 관련 내용은 여당의 요구를 많이 반영했다.

같은 날, 민주당은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100미터 집회를 금지하는 것도 국민의힘과 합의했다. 10만 명이 대통령 집무실 정문까지 행진해 가서 윤석열 퇴진을 외친 지 일주일도 안 돼 민주적 권리 제약을 뻔뻔하게 합의한 것이다.

퇴진 집회가 민주당의 2중대이기는커녕, 민주당은 퇴진 집회에 도움이 안 되는 행위를 하며 등을 돌려 버린 것이다.

민주당이 여야 공통 공약 입법 추진에 합의한 것도 문제다. 윤석열과 공통된 공약은 십중팔구 나쁜 공약일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게 있다고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주장하는 것은 퇴진 구호에 물타기 하는 효과를 낼 뿐이다.

민주당이 반윤석열 투쟁을 일관되게 벌일 수 없는 것은 그 당도 윤석열 정부가 하려는 경제 위기 고통 전가와 기업 이윤 보호 등을 명백히 찬성하는 친자본주의 정당이기 때문이다.

변화 염원 대중의 쓰라린 대안 부재감 속에서도 윤석열 반대 정서는 계속 늘고 있다. 이런 정서가 더 커지고, 기꺼이 행동으로 연결되면 윤석열 정부에 커다란 압박이 될 것이다.

국정조사 합의
국회보다 거리 운동이 훨씬 중요하다

11월 23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11월 24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45일간 하기로 했지만, 애초 60일 요구에서 후퇴한 데다 실제 시작은 예산안을 처리한 뒤에 하기로 했으므로, 실제 기간은 45일이 안 된다.

대통령실의 국정상황실을 조사 대상에 포함했지만, 나머지 기구는 모두 뺐다.

국민의힘은 수사에 방해가 된다며 국정조사에 애초 반대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가 윗선은 수사하지 않는 꼬리 자르기식 수사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여당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 대통령 책임론이 커지면서 난처한 처지에 있었다. 게다가 의석 수에서 밀려 정부 예산안 통과도 쉽지 않았다. 보통, 야당들은 정부 예산안을 볼모로 잡아 여당과 입법 거래를 시도한다. 그런 점에서 보면, 민주당은 국정조사 시작도 미루면서 예산안의 빠른 통과를 약속해 준 셈이니 국민의힘에 득 되는 합

▶ 5면으로 이어짐

정의당 청년 대표의 윤석열 퇴진 반대론, 소심하다

김창인 청년정의당(정의당 청년 부문) 대표(사진 오른쪽)가 "퇴진은 추모가 아니"라며 윤석열 퇴진 운동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세월호 참사 이후 촛불 들고, 대통령도 끌어내렸지만 결국 대통령 면면이 바뀐 것 말고는 변한 게 없는데, 시민사회 일부가 이태원 참사에 세월호 참사와 항의 운동의 경험을 과도하게 투영해 정권 퇴진 구호를 내거는 대응을 반복하고 있다."

그는 안전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성과 성찰 없는 대안"인 정권 퇴진 운동을 할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책임과 같은 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추모의 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권에 대한 분노로 귀결되지 않는 방식의 "추모의 정치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많다. 책임자 처벌도 불충분했다. 특히, 노동자들의 일터는 여전히 안전 취약지대가 많다. 그래서 산업재해가 줄지 않고 있고, 수시로 비극적인 산재 사망 소식을 접한다.

이는 반복되는 재난의 근저에 안전과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자본주의 국가가 보호한다.

윤석열 퇴진 운동은 자본주의 국가의 평상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맞서는 투쟁이다.

김창인 대표는 정권이 아니라 국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일견 급진적으로 보이지만 실은 현실의 투쟁에서 도망가고 있다.

그는 참사 후 일주일 만에 윤석열 퇴진 요구가 순식간에 제기된 것이 문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퇴진 집회에 수만 명이 참가한 것은 이태원 참사가 윤석열의 경찰이 대통령 경비, 공안, 마약과의 전쟁 등에 집중하면서 대중의 안전을 소홀히 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직감했기 때문이다.(〈노동자 연대〉는 대중의 직감을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을 뿐이다.)

사진 출처 청년정의당 김창인 대표 페이스북
문제는 퇴진 운동이 아니라 정의당이 대중의 분노와 윤석열 퇴진 지지 정서를 지지하지 않는 것이다

김창인 대표는 운동을 고무하기는커녕 회의감을 피력한다. 게다가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과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 운동이 한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세월호 이후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

그러나 이 운동들은 박근혜 퇴진을 이뤄내 9년 동안 지속된 우파(이명박근혜) 정부가 막을 내리게 했다.

대중의 의식도 변했다. 지난 8월 한국리서치가 한 국가예산에 대한 인식 조사를 보면, '직접 정부 예산안을 짠다면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본 분야 1위로 재난안전 분야가 꼽혔다.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한 것도 이런 경험의 산물이다. 한 여론조사(〈경향신문〉)에서 응답자 10명 중 7명이 참사의 책임이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등 정부에 있고, 그중 대통령실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답했다.

문제는 정의당 같은 주요 진보정당이 소심해서 대중의 이런 분노와 윤석열 퇴진 지지 정서를 지지하지 않는 것이다.

정의당이 헌정 질서의 틀을 벗어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2016년 박근혜 퇴진 운동이 분출하던 때도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질서 있는 하야"를 주장했다. 헌정 질서 내에서의 퇴진 로드맵을 그렸던 것이고, 이것이 나중에(뒤늦게야!) 민주당과 함께 탄핵 절차를 밟는 것으로 이어졌다.

김 대표는 '국가 책임을 묻는 것이 정권 책임 묻는 것으로 수렴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국가의 평상시 핵심부를 운영하는 수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국가 책임을 물을 방법이 있는가?

김 대표가 대통령 퇴진을 넘어서는 상상력을 말하지만, 이런 미사여구는 사실상 수동적 급진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정의당의 한 청년 활동가는 김 대표의 SNS에 이런 댓글을 달았다. "정권교체를 넘어서자고 주장하시지만, 저에게는 그간 여러 단위에서 제시된 그 어떤 주장보다도 현상 유지론적으로 받아들여지네요."

정권 책임 패싱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민주당-국민의힘 간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라고 했다.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가 퇴진 운동을 반대하며, "추모의 정치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정의당의 당론을 옹호하는 것이다.

정의당의 좌파 의견그룹인 전환 소속인 김 대표가 당 지도부의 온건한 입장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그의 입장은 '전환'의 입장인가?)

김 대표는 정권 퇴진-교체론이 '국민의힘-민주당' 양당 구도를 강화할 뿐이라고 보는 듯하다. 이는 정의당과 김 대표의 퇴진 운동 반대가 정의당이 공식 정치에서 주변화된 상황에서 느끼는 무력감과 수동성을 반영하는 듯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 대한 대중의 커다란 반감이 존재하고(사실 이태원 참사 전부터 누적되고 있었다), 이것이 퇴진 운동으로 일부 표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운동을 반대하는 태도는 정의당을 계속 주변적 세력으로 만들 뿐이다.

이현주

▶ 4면에서 이어짐

의를 해 준 셈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국정조사를 빨리 시작하려면 정부의 긴축 예산안을 서둘러 처리해 줘야 하고,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갈등을 벌이면 국정조사 기간이 짧아지게 된다. 합의로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지만, 국민의힘이 합의를 해 주지 않을 공산이 크다.

게다가 국정조사 과정마다 여당은 사사건건 여야 합의로 하자며 발목을 잡을 것이다. 그 사이 윤석열은 시간을 벌며 반격을 시작할 것이고, 이미 그러고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본지는 국정조사 요구를 앞세우는 것은, 여당에 발목 잡혀 시간만 끌고 대중의 주의를 국회로 돌리도록 해, 거리 운동 확대에 효과적이지 못할 거라고 경고했던 것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국정조사 합의로 "국회의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거 많은 국정조사들이 예외 없이 그랬듯이, 국회는 말다툼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김문성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G20 정상회의에서 세를 과시한 신흥국들

세계 수준의 제국주의적 경쟁이 거세지자 신흥국들에 기회가 생기고 있다. 이것이 지난주 발리 G20 정상회의의 교훈이다.

G20은 "선진국과 신흥국을 연결하는 전략적 다자주의의 장"을 표방한다. 여기에는 G7을 이루는 서방 제국주의 열강과 그들의 가까운 동맹국인 한국 · 호주가 속해 있다. 여기에 더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주요 개발도상국인 인도 · 튀르키예 · 사우디아라비아 · 브라질 · 멕시코 · 아르헨티나 · 남아프리카공화국 · 인도네시아가 포함돼 있다.

G20은 2007~2009년 국제 금융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각국이 손발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됐다. 그러나 미 · 중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G20은 갈수록 마비됐다. 필자를 포함해 많은 논평가들이 지난주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그 예측은 틀린 것으로 드러났다.

G20 정상회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 전쟁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고통을 낳고, 가뜩이나 위태로운 세계경제를 더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성토했다. … 핵무기 사용과 핵무기 사용 위협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갈등의 평화적 해결, 위기 해결 노력, 외교와 대화가 절실하다. 오늘날이 전쟁의 시대가 돼서는 안 된다."

회의에 불참한 러시아 대통령 푸틴에게는 큰 낭패다. 개발도상국들은 지난 3월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지자 대체로 기권했고, 러시아를 상대로 한 서방의 경제 전쟁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파이낸셜 타임스〉가 묘사했듯이 이제 푸틴은 러시아와 함께 브릭스(BRICS)를 이루고 있는 파트너들(브라질 · 인도 · 중국 · 남아프리카공화국)과 G20 개최국 인도네시아가 "전쟁 비판 공동성명을 내는 게 아무 성명도 내지 않는 것보다 낫다고 결정적인 부동표를 쥐고 결정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사진 출처 G20 Indonesia

우크라이나 전쟁 규탄 결의안이 통과된 G20 정상회의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핵무기 사용 위협

어째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가? 두 가지 명백한 이유 때문이다. 첫째, 모두가 푸틴의 핵무기 사용 위협을 싫어한다. 미국과 러시아의 전면전이 초래할 방사능과 핵겨울에서 안전한 곳은 아무 데도 없을 것이다. 둘째, 공동선언이 밝히듯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인플레이션을 악화시켰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개발도상국 사람들에게 특히 큰 고통을 줬다.

중국은 다소 마지못해 공동선언에 동참했다. 십중팔구 러시아와 덩달아 따돌림받지 않으려는 것일 테다.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미국 대통령 바이든을 당선 이후 처음으로 직접 만났다. 시진핑은 대체로 건설적인 세계적 강국으로서 중국이 할 구실을 강조한 듯하다.

대체로 말해 이번 G20 정상회의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승리였다. 그러나 그 의미를 부풀려서는 안 된다. G20 공동선언은 현재 진행 중인 전쟁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성명 초안을 마련하는 데에 매우 적극적이었던 인도는 계속 러시아산 석유 · 가스를 대규모로 사들일 것이다. 미국과 신흥국들의 입장차를 좁히려 애쓴 사우디아라비아는 에너지 카르텔인 '오펙 플러스(OPEC+)'에서 러시아와 계속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다.

발리 G20 정상회의는 주요 신흥국들이 미국 · 중국 · 러시아의 지정학적 갈등에서 운신의 폭을 발견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튀르키예 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은 높아진 영향력을 이미 한껏 과시한 바 있다. 튀르키예는 흑해에서 지중해로 드나드는 해협들을 지배한다. 또, 나토 회원국이면서도 러시아와 대체로 우호적인 관계여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득을 보기에 좋은 위치에 있다. 이를 지렛대 삼아 몇 주 전 에르도안은 푸틴의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 튀르키예의 중재로 마련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허용하는 협정을 푸틴이 파기하려 하자 이를 저지했던 것이다.

이는 냉전 때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중립을 추구한 탈식민 국가들의 비동맹 운동과는 다른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이데올로기적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 아류제국주의를 표현하는 국가들이 득을 보려고 책략을 펴는 것에 더 가깝다.

지금은 냉전 시기와는 상황이 다르다. 1960년 미국과 유럽은 세계 산출량의 거의 4분의 3을 차지했다. 지금은 약 4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적 경제력의 균형이 신흥국들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제 그것의 지정학적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832호 / 번역 이원웅

대체로 말해
이번 G20 정상회의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승리였다. 그러나 그 의미를
부풀려서는 안 된다.

한미일 정상회담과 북한 새 ICBM 발사

11월 18일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을 시험 발사했다. 북한 외무상 최선희가 한미일 정상회담의 확장 억제력 강화 결정을 비난하며 "군사적 대응"을 경고한 다음 날의 일이었다.

앞서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와 한미일 연합훈련들이 교차하면서 한반도에 긴장이 높아졌었다. 이에 더해 최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 억제' 제공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미국의 핵우산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한미일 정부들은 북한 ICBM 발사에 공세적으로 대응했다. 18일 한국군은 스텔스 전투기인 F-35A를 동원해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모의 표적을 타격하는 훈련을 벌였다. 여차하면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 있음을 보여 준 것이다.

11월 19일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가 서해에 전개돼 한국 전투기들과 함께 무력시위를 벌였다. 같은 날 다른 B-1B 폭격기 2대도 일본에서 자위대와 훈련을 벌였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압박 속에서도 북한은 핵실험이나 새로운 미사일 발사 등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조선로동당 부부장인 김여정은 미국과 한국의 "위험성이 짙은 군사 연습들과 과욕적인 무력 증강"에 맞서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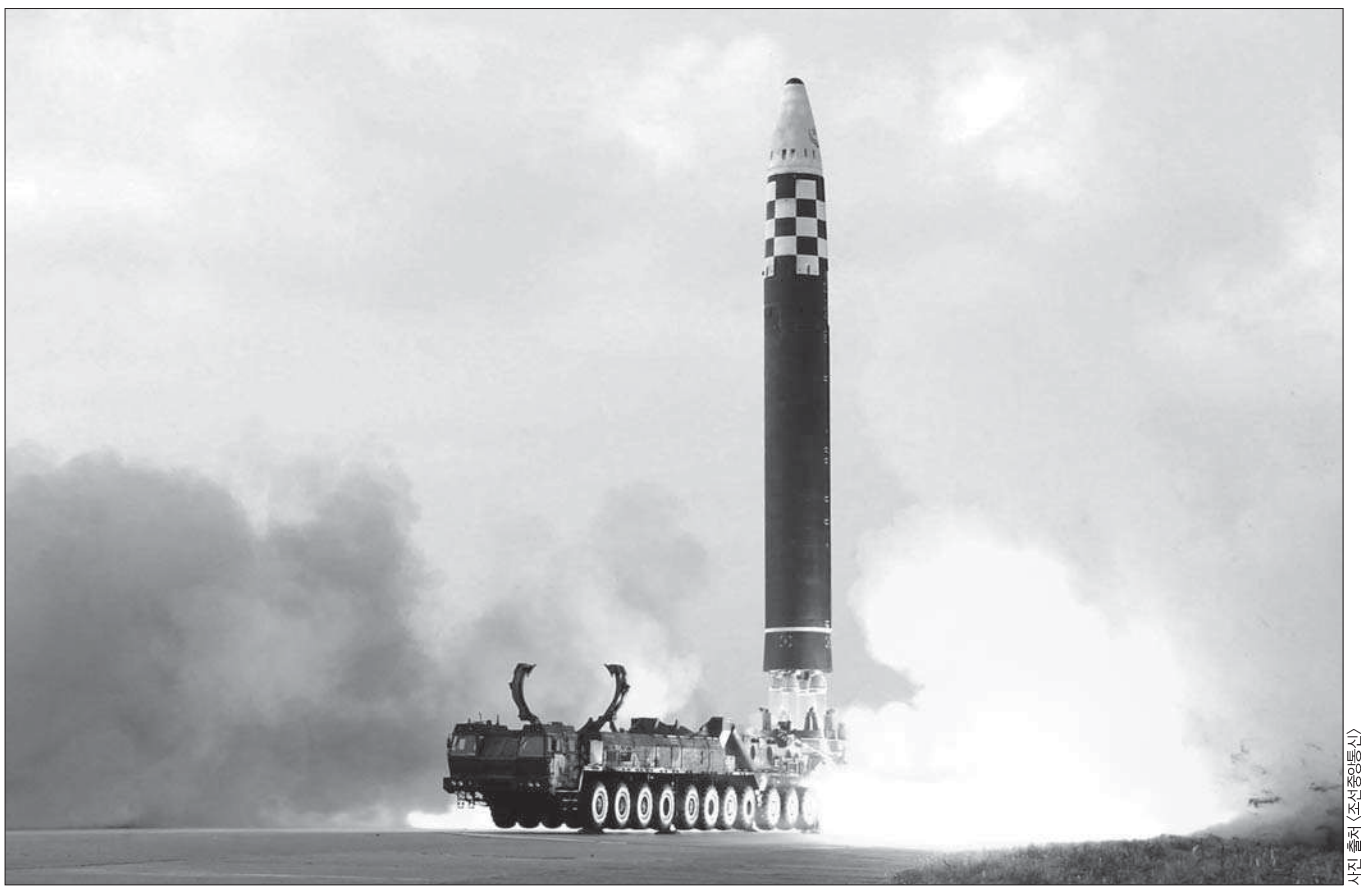


사진 출처 〈조선중앙통신〉

압박 강화의 결과 북한이 공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 그 배경에는 미·중 갈등 심화가 있다

서해

이런 긴장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미국과 중국,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갈등이 있다. 점증하는 미 · 중 갈등 속에 한반도 긴장은 한동안 지속될지 모른다.

당장 앞서 언급한 미국 B-1B 폭격기의 서해 출격은 북한뿐 아니라 지척에 있는 중국을 공공연히 견제한 행동이었다.

앞서 지난 10월 바이든 정부는 새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공개하며, 중국을 "유일하게 국제 질서 재편 의도를 갖고, 그럴 만한 경제적 · 외교적 · 군사적 · 기술적 역량을 갖춰 가고 있는 경쟁자"로 규정했다.

중국은 핵무기를 증강하는 등 자국의 핵무력을 강화하는 중이다.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는 중국의 이런 움직임을 경계하며, 2030년대에 이르면 미국이 처음으로 두 개의 핵무기 강대국들(중국과 러시아)을 억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미국도 핵무기를 현대화하고 동맹국들에 대한 확장 억제력 제공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입장은 이후에 공개된 미국의 새로운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도 반영됐다. 그 보고서에서 바이든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맞춤 억지를 위해 W76-2 같은 새 저위력 핵탄두(전술핵)를 유지할 것이며, 새로 개량된 B61-12 핵폭탄도 배치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억지를 위해 "전략폭격기, (핵무기 공격과 재래식 공격이 가능한) 이중 용도 전투기, 핵무기"를 전진 배치할 의향도 드러냈다. 또한 "한 · 미 · 일 3자 또는 호주까지 포함한 4자 간 정보 공유와 협의"가 강조됐다. 중국 · 러시아 등 경쟁자를 겨냥해 핵무력을 강화하고 이를 실전에서 쓸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노골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한미일 정상회담의 논의를 봐야 한다. 그 정상회담에서 언급된 확장 억제 강화는 결국 북핵을 빌미로 미국이 주로 중국을 염두에 둔 군사력 전진 배치와 동맹 강화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이미 진행 중이다. 호주 북부 다윈에 미군의 B-52 전략폭격기 6대를 운용할 대규모 군사시설 건설이 추진 중이다. 그리고 최근 미국은 필리핀에 미군을 순환 배치할 기지를 몇 군데 추가하기로 필리핀 정부와 합의했다. 그 후보지들 중 카가얀주는 대만과 가까운 요충지이며, 팔라완섬은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난사군도와 마주한 곳이다.

중국 정부도 미국이 북핵 '위협'을 명분 삼아 자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관철시키려는 데 불만을 품고 있다. 11월 13일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 전문가의 말을 빌려 이렇게 주장했다. "중국은 미국이 한 · 일 군사 협력을 진전시키고 미국의 '아시아판 나토' 계획을 실현하려고 북핵 문제를 이용하고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진정한 의도는 중국을 봉쇄하는 군사 협력을 진전시키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달갑지 않게 여겨 온 중국이 최근 들어 미국의 대북 제재 강화 제안을 거부하며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까닭이다.

불만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관료들은 미 · 중 간의 제국주의적 갈등으로 지역 내 불안정이 점증하는 데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다. 그리고 미국 바이든 정부가 자신의 동아시아 전략을 위해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데 불만이 쌓여 왔다. 그들은 이를 표현했지만, 미국은 이를 무시했다. 그러자 북한은 잇단 무력 시위로 이런 상황에 균열을 낼 수 있음을 보여 주려 하는 것이다.

미 · 중 갈등은 대만해협을 비롯해 동아시아 곳곳에서 긴장과 충돌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한반도도 그런 갈등의 일부다.

그래서 반제국주의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 서로 싸우는 열강 중 어느 한쪽을 지지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미국과 한국 지배자들이 가하는 대북 압박에도 반대해야 한다. 미국과 한국은 독자 대북 제재를 추진하는 한편, 잠수함 연합 훈련 등을 또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핵에 대응해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조하며, 동맹 강화에 협력하고 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동일한 이름의 전략까지 공개하며 한미동맹 강화에 적극적이다. 정부와 여권 관계자들은 빈번하게 대북 선제 타격론, 전술핵 배치 등을 언급하며 자체의 군국주의 강화에 열을 올리는 중이다.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의 위험한 선택, 즉 한미동맹 강화와 군국주의 강화에 반대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 한반도 정책 전환 또는 대북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것은 쇠귀에 경 읽기일 것이다. 한반도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윤석열이 퇴진해야 마땅한 이유의 하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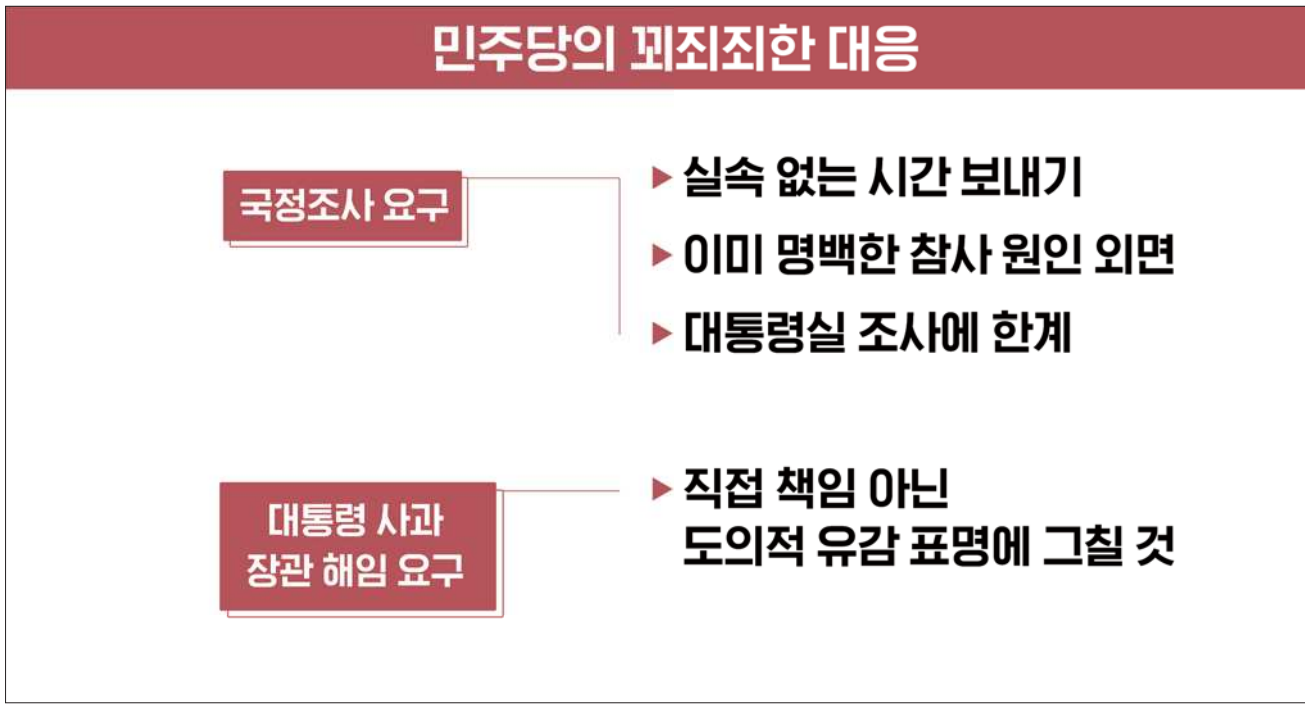
김영익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김문성

이 글은 11월 22일에 같은 제목으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

영상 보기



많은 사람들을 충격과 슬픔에 빠뜨린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3주가 넘었습니다. 그동안 이태원 참사의 책임 규명을 둘러싼 치열한 힘겨루기가 벌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태원 참사의 진정한 책임자가 윤석열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참사 당일 서울 도심, 특히 이태원에서 공권력 배치는 정부 비판 집회에 대한 감시와 소위 '마약과의 전쟁'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참사 당시 이태원에 이태원 파출소 소속 경찰관도 아니고, 마약 수사 경찰관도 아닌 파견 경찰은 겨우 6명이었습니다. 경찰력이 거의 다 공안과 '마약과의 전쟁'에 투입된 것입니다.

이러한 경찰력 배치는 국가보안법 탄압과 MBC 취재 불허를 통한 언론 길들이기 같은 권위주의적 통치를 위해 윤석열이 강조하고 그 자신이 세운 우선순위의 직접적 결과였습니다.

국민의힘이 통제하는 서울시와 용산구도 윤석열의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대책 내용과 인원 배치를 했고, 그래서 이태원 밀집인파 안전관리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책임 회피와 전가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책임 회피와 전가를 위해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윤석열은 참사 직후 연 첫 회의에서 '참사', '희생자'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경찰청을 통해 유가족 통제 방안과 시민사회단체 동향 보고서를 작성케 해 사건 무마에 활용하려 했습니다.

국회와 언론 사찰을 자행한 정황 등도 드러났습니다. 〈노동자 연대〉 신문도 이에 포함됐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담당 장관 등이 모두 '희생자들이 놀러갔다 우발적으로 생긴 사고'라는 식으로 말하며 정부 책임을 회피해 왔습니다.

위패도 영정사진도 없는 분향소를 차리고 기만적인 관제 애도 주간을 가지더니, 그 뒤 책임을 일선 공무원들과 한두 명의 행정 관료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정부 자신이 하지 않아 민간에서 한 희생자 명단 공개를 국민의힘은 얼토당토않게 '2차가해'라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158명이나 죽게 만든 정부의 진정한 가해 책임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정국 전환을 위해 해외 순방 성과를 강조하고, 이재명 측근들을 수사하고, MBC 외에도 YTN과 TBS 등 언론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를 비판하는 언론을 국가 안보를 해치는 가짜뉴스 매체 정도로 취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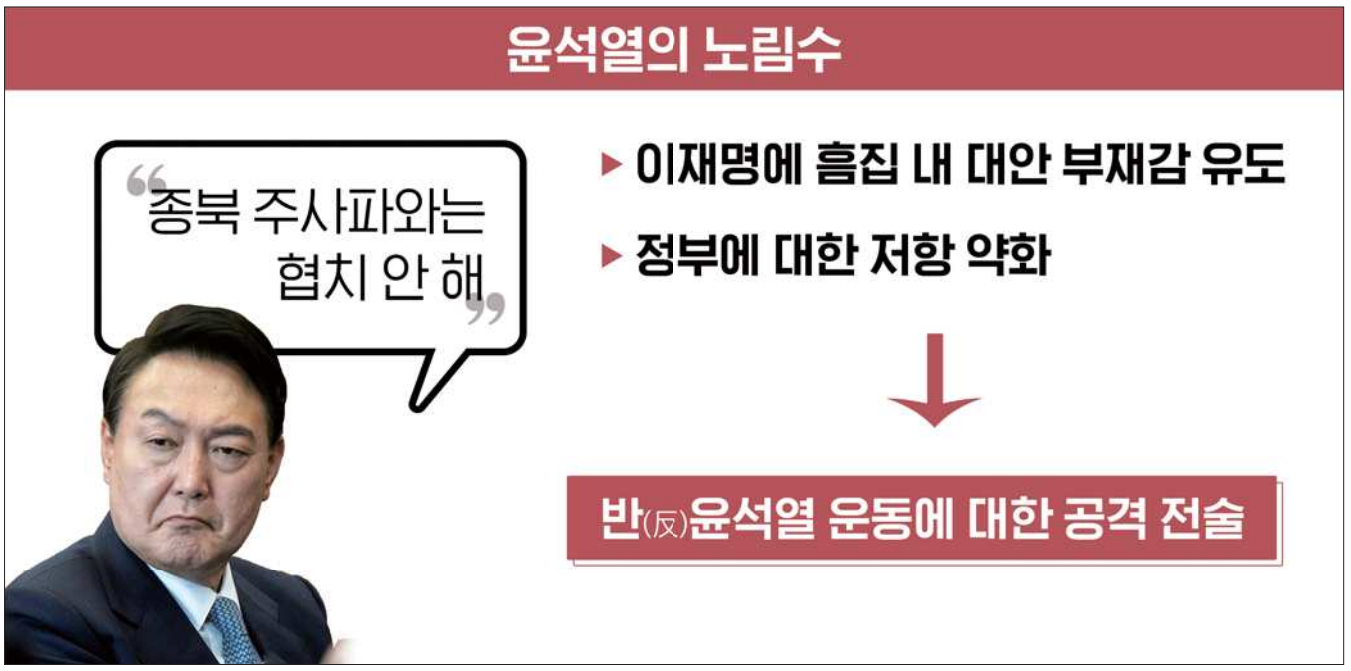
국민의힘은 퇴진 집회에 참가한 민주당 의원 7명을 어이없게도 "이태원 참사 7적"이라고 불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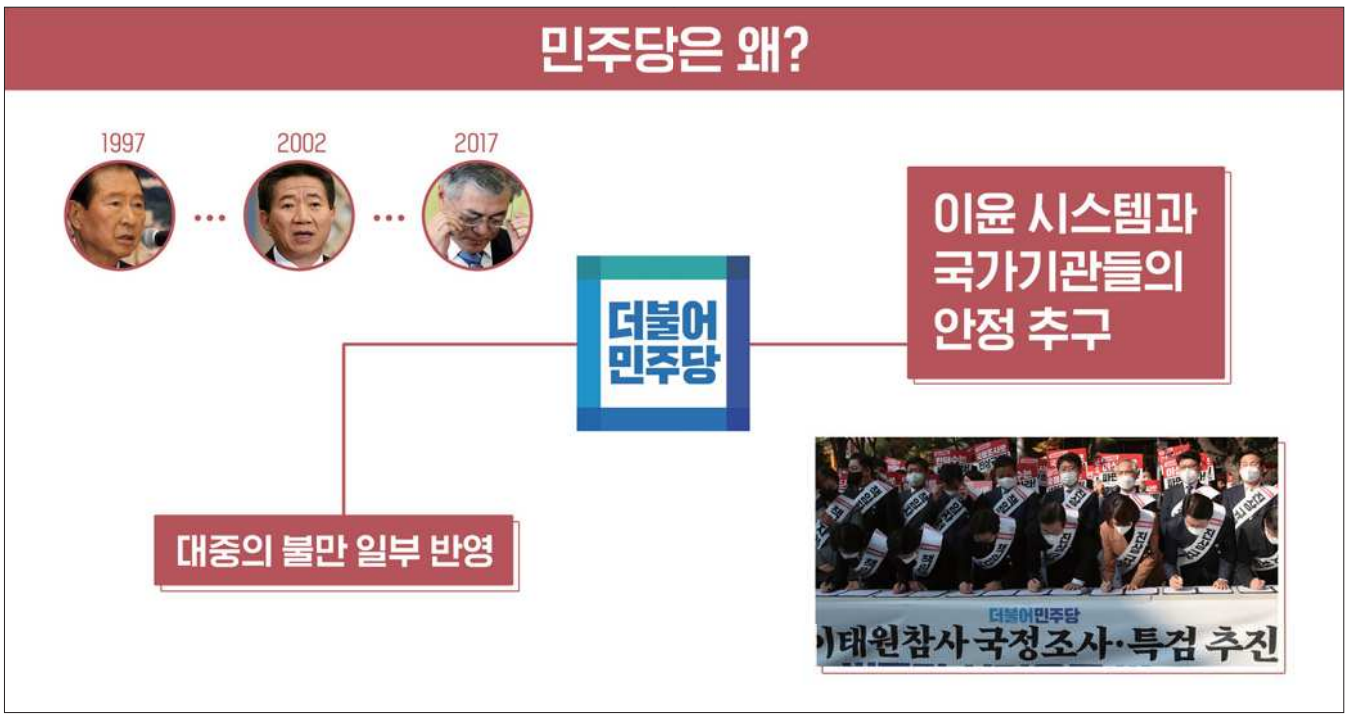
윤석열과 정부 · 여당의 이런 사후 대응의 논리는 참사를 유발한 자신의 우선순위와 권위주의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참사 전에 하던 대로 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인 11월 19일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가 대규모로 열린 것이 이를 보여 줍니다.

윤석열이 순방을 앞세워 국면 전환에 그토록 애썼는데도 수만 명이 이 집회에 모였습니다.

현 시국에서 민주당의 역할





그러나 제1야당이자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윤석열과 여권의 적반하장에 대한 강력한 대항마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직후 민주당은 이태원참사대책본부를 만들었습니다. 핼러윈 당일의 마약 수사 문제도 지적했고요. 심지어 마약 수사 실적을 위해 정복 경찰 배치를 회피했던 것 아니냐는 예리한 질문도 했었습니다. 당일 경찰 배치도 민주당 의원들의 자료 요구로 자세히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의 직접 책임을 묻진 않고 있습니다.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거나 동참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요. 대신 대통령 사과, 진상규명, 책임자 경질 등을 요구하며 국정조사에 무게중심을 두고, 범국민서명운동과 여당과의 협상을 투트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려고 밭갈이운동본부, 개혁운동본부 등 노골적으로 친민주당적인 일부 시민단체들은 11월 19일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와 같은 시간대에 별도로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 집회에는 겨우 300명정도밖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 7명이 수만 명이 모인 윤석열 퇴진 집회로 와서 대통령 사과와 국정조사 요구를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국정조사가 실시돼도 실속 없는 시간 벌기임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당은 빠르게 이태원 참사 정국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국정조사를 못 받아들인다고 뻗대고 있지만 말입니다.

참사의 원인이 윤석열에게 있음이 진실인데도 국정조사로 진상 규명을 하겠다는 것은 그 진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일선에서 벌어진 세부적인 문제들은 지엽적인 것입니다. 본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정조사는 결국 국민의힘과의 협상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실 등에 대한 조사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사과나 장관 해임을 요구해도 그것은 직접 책임은 없다는 대통령이 그저 '도의적으로 미안하다, 유감이다' 하는 수준의 막연한 사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이태원 참사에 대한 민주당 대응은 꾀죄죄합니다.

반면 정부 여당은 민주당을 강력하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검찰이 확증도 없이 이재명을 대장동 비리의 주범으로 기정사실화해 공격하고, 국가보안법 탄압, 안산시 세월호 지원금 관련 마녀사냥, MBC 배제 등 언론 길들이기 등이 이어졌습니다.

몇 주 전 윤석열 본인이 "종북 주사파와는 협치하지 않겠다"고 공개 선언했는데, 이것은 민주당 지도부를 겨냥한 말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윤석열이 노리는 것은 이재명에 흠집을 내 윤석열 반대 운동의 대의를 훼손하고 대안 부재감을 심화시켜 개혁 염원 대중의 사기를 떨어뜨리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정부에 대한 저항도 약화시켜서 다가오는 경제 위기의 고통을 더 쉽게 전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반대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확실한 증거도 없이 이재명을 공격하는 것을 모른 척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반윤석열 운동 일반에 대한 공격의 전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군부 독재를 계승하는 여당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계승한다고 표방하는 민주당은 윤석열에게 제대로 맞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응해 별로 한 일이 없고, 당사 압수수색도 허용했고, 의원들에게 윤석열 퇴진 집회 참가 자제도 요청했죠.

돌아보건대 민주당은 1987년 매우 투쟁적이고 급진적인 노동운동이 등장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점점 온건해져 왔습니다.

1997년 최초 집권 이후 25년 사이에 세 번이나 집권을 하고, 세 번이나 총선 제1당을 해 보고, 이젠 광역-지방 정부와 의회 운영 경험도 많습니다. 민주당의 요즘 인재풀을 보면 과거와는 다릅니다. 이제 민주당은 야당일 때도 국가기관 안에 공공연한 관료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이 재벌 등 대기업 소유주들, 군장성과 경찰 간부를 포함한 국가 관료, 언론사 사주 등 지배자들에 노골적으로 유리하게 국정을 운영하는 것에 반해, 민주당은 과거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역사와 포퓰리즘적 전통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민주당이 하는 구실은 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을 달래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들의 목소리를 매우 제한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말입니다. 민주당도 경제 위기 고통을 노동계급 등 서민층에 전가하는 것에 협조하며 기업 이윤과 권력 보호에 힘쓰는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대중의 불만을 일부 반영하지만, 이윤 시스템과 국가 기관들이 불안정에 휩싸이는 것은 결코 반기지 않습니다. 이태원 참사라는 충격과 명백한 윤석열 책임 앞에서 민주당이 하는 일이 거의 없는 것은 근본적으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8년에 문재인 정권의 인기가 떨어지자, 민주당은 군부가 박근혜 퇴진 운동을 무력 진압하려 모의했던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하지만 군부와의 관계나 국가기관의 안정을 위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덮었습니다.

2004년 노무현 탄핵 집회에 대한 태도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당시 노무현 정부의 내각과 경찰은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은 의

▶ 10면으로 이어짐

▶ 9면에서 이어짐

원과 당원들에게 집회 참가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사회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의 조처를 이해한다면서 말입니다.

최근 국민의힘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윤석열 퇴진 집회 참가를 대선 불복이고 헌법 질서 불인정이라고 얼토당토 않게 비판하는 것에 민주당이 움찔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사실 국정조사가 실효가 있다고 생각할 만큼 민주당이 순진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그저 국정조사를 활용해 윤석열에게 흠집을 내는 맞불을 놓으며 대장동 수사 등 불리한 여론에 맞서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 책임임을 알면서도 그저 다음 집권에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지 않는 선에서 윤석열 책임론을 활용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진 이매진

대중의 분노는 윤석열을 향하고 있다. 윤석열 퇴진 운동은 더 커져야 한다

윤석열 퇴진 운동과 그 미래

그런데 참사에 항의하는 세력의 동향은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

참사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그 인적 청산 문제도 다루는 일은 참극의 재발을 막고, 참사로 인한 희생자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실제적인 길입니다.

그러나 민주노총, 정의당, 진보당 같은 주요 좌파 단체들의 접근법은 회피적입니다. 지엽 말단 문제들로 시간 낭비하며 지나치게 타협적인 요구들을 내놓았습니다. 윤석열의 책임을 거론했어도 책임의 정도를 과소평가하는 대통령 사과 요구를 내놓았습니다.

다행히도 윤석열 퇴진 운동 조직자들이 이태원 참사의 주범으로 윤석열을 지목했습니다. 이 집회로 대중의 분노가 표현됐고, 지난 주말에는 10만 명 가까이 참가했습니다. 이 운동은 더 커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윤석열에 대한 분노와 퇴진 염원을 모으고, 이태원 참사를 부른 윤석열의 우선순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더 급진화돼야 합니다.

이 점에서 지난 19일 전국 집중 집회에 대통령 사과만을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을 집회 연단에 올린 것은 일관성 없는 행위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을 못 오게 했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윤석열을 규탄하는 국회의원들을 운동에 동참시키는 것은 운동의 초기 국면에선 괜찮은 전술입니다.

하지만 좀 덜 선명하게나마 퇴진을 주장한 유정주 비례의원을 제외하면 그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퇴진을 염원하는 사람들 다수를 자기네 어젠다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해 온 사람들입니다.

기층 대중 운동과 좌파 내에서 퇴진을 요구하냐 마느냐가 예리한 쟁점이 된 상황에서 사과나 모호한 책임 운운하는 정치인에게 연단 연설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운동 지지자들을 명확하게 만들기보다 모호함으로 이끌고 운동의 효과성을 줄이는 데 일조하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상황에선 운동의 마비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퇴진 운동 조직자들은 그들이 집회에 참가했다는 사실 정도만 집회 참가자들에게 공지하는 게 바람직했을 것입니다.

윤석열은 이태원 참사에 직접 책임이 있다. 또 경제 위기의 고통을 서민층에 전가하는 공격을 하며 이를 권위주의적 수단들로 관철하려 한다. 좌파는 윤석열 퇴진 운동에 동참하고 이 운동이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편, 앞서 말했듯이 좌파 단체 다수는 참사에 대한 항의를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면공격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윤석열 퇴진론과 선을 긋고 그 대체용으로 국정조사를 주장합니다. 민주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로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리 투쟁보다는 의회 활동을 더 부각시켜 운동의 표적과 목표를 분산시키고 윤석열 책임론을 흐리는 비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윤석열은 이태원 참사에 직접 책임이 있습니다. 게다가 경제 위기의 고통을 서민층에 전가하는 공격을 시작했고, 그 공격을 권위주의적 수단들로 관철하려 합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좌파는 윤석열 퇴진 운동에 동참하고 이 운동이 더욱 크게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윤석열 퇴진 운동을 해 봤자 민주당에만 득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박근혜 퇴진 운동에서 윤석열 집권으로 이어지는 과정도 필연이 아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맞서 투쟁하기를 회피한 온건 좌파의 개혁주의적 지도부들이 행한 잘못된 선택(전략)이 문제였습니다.

온건 좌파의 개혁주의적 지도부들은 문재인의 역주행을 비판하다가도 우파에 유리하게 이용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금세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부와의 대결을 회피하고, 문재인과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노동 대중의 변화 염원이 더 급진화되지 못하고 대안 부재감을 느끼며 사기 저하되고 방향감각을 잃었습니다. 우파는 그 틈을 파고든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개혁주의 지도자들이 이번에도 반정부 투쟁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오류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퇴진 운동의 미래, 그리고 윤석열 퇴진 후의 미래는 미리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 미래는 앞으로 퇴진 운동과 좌파가 할 수 있는 정치적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금 경색 위기에도 기준금리 올리는 한국은행의 딜레마

강동훈

11월 24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퍼센트포인트 인상했다.

이로써 올해 1월 1퍼센트에 머물던 기준금리가 1년도 채 안 돼 3.25퍼센트로 급등했다. 이는 2011년 6월 이후 11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11월 초 미국의 기준금리가 0.75퍼센트포인트 올라 이번에 한국은행도 0.5퍼센트포인트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꽤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0.25퍼센트포인트 인상을 결정했다.

한국은행은 "단기금융시장이 위축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발 위기로 촉발된 한국 금융시장의 자금 경색 문제가 심화되자 기준금리 인상 폭을 낮춘 것이다.

금리 인상으로 한국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지만,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압박을 계속 받을 것이다. 이미 미국 기준금리가 4퍼센트로 한국보다 높은 데다가 내년 상반기까지 미국 기준금리가 5퍼센트를 넘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기 때문이다.

한미 간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더 높은 수익을 따라 한국서 이탈해,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외환위기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릴 게 뻔하기 때문에 한국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계속 커지고 있다. 특히 부동산 가격 하락과 미분양 주택 급증으로 건설사들과 건설 사업에 대출을 많이 해 준 제2금융권에서 부도 위기가 급격하게 높아졌다.

최근에는 5대 대기업집단 중 하나인 롯데그룹이 자금난으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금융시장에 퍼졌다.

부동산 PF 부실로 위기에 빠진 롯데건설은 롯데그룹 다른 계열사들로부터 한 달여 만에 1조 5000억 원 가까운 자금을 빌렸다. 그러자 롯데건설에 돈을 빌려준 다른 계열사들도 자금난을 겪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진 것이다.

롯데건설 같은 대기업 계열 건설사조차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구하지 못해 계열사에 손을 벌릴 정도로 자금 경색 위기가 심각해지자, 중소 건설사들과 금융회사들이 연쇄 부도에 빠질 것이라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에 50조 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는데도 금융 불안정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 대책이 큰 효과를 내지 못하는 까닭은 정부나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에 직접 돈을 투입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대책은 상대적으로 자금 사정에 여유가 있는 시중 은행들을 동원해 회사채나 부동산 PF 채권 등을 매입하고 기업 대출을 늘려 주는 방안이다. 정부의 압박으로 5대 시중 은행들은 연말까지 95조 원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업들은 은행들이 몸을 사리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한다.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기업들은 신용도가 낮은 기업인데 은행들이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에만 대출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시중 은행들도 무작정 대출을 늘릴 수 없는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 정부는 자금이 은행들로 쏠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은행 채권 발행이나 예금 금리 인상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결국 정부가 은행에게 돈을 투입하라고 촉구하는 동시에 은행의 돈줄은 죄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턱대고 대출을 늘리면 은행 자체의 안정성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윤석열 정부와 한국은행은 해외 금융시장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직접 금융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꺼리고 있다. 금융 위기가 외환 위기나 정부 재정 위기로 확대될까 봐 노심초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계속 미봉책을 내놓으며 시간만 끌려 하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 전반을 마비시키는 대형 위기가 터질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사진 이미지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때문에 금융 위기가 터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려야 하는 딜레마에 처해 있다

좌파와 노동운동은 서민층 생활고 문제를 우선시해야

한편, 금리가 치솟으면서 고금리에 허리가 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1월 아파트를 살 때 4억 원을 대출받은 사람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은 월 200만 원 정도였는데, 이제 월 268만 원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11월 3퍼센트 수준이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제 6퍼센트를 넘었기 때문이다.

내년까지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진다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9퍼센트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월급의 대부분을 은행 빚을 갚는 데 써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이미 올해 6월 월 소득의 40퍼센트 이상을 빚 갚는 데 쓰는 취약 차주 비중은 전체 대출자의 18퍼센트나 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은 금리가 1퍼센트포인트 상승하면 취약 차주 비중은 20.2퍼센트로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서민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부채를 탕감해야 한다.

그러나 정의당, 진보당 등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 보고 있다. 가계 대출이 한국 GDP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부채 축소, 거품 관리 등을 해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다.

대신 주로 다중채무자 · 자영업자 ·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제는 늘려야 한다고 요구한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자영업자 지원과 부채 관리 강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근 진보당은 '가계부채 119'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주로 부채 상담을 해 주겠다는 것이지 부채 탕감 운동 건설에 관한 것은 아니다.

물론 취약한 다중채무자와 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치솟는 금리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사람은 단지 이들뿐이 아니다. 집값이 치솟는 상황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로 수억 원씩 빌린 서민이 많다. 게다가 생활비를 보충하려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도 많다.

정의당, 진보당 같은 좌파 정당들이 노동자를 비롯한 서민층의 필요보다 한국 자본주의 경제의 안정을 우선에 두면, 서민층의 이해관계를 일관되게 대변하기 어렵다.

대출 금리 인하와 부채 탕감 같은 요구를 내놓고 생계비 위기와 고통 전가 공세에 맞서는 광범한 대중 저항이 일어나야 한다.

이란

정권에 대한 압박 키우는 새로운 시위 물결

닉 클라크

사진 출처 akhbar-rooz.com

11월 16일, 이란 시위의 일부로서 파업 중인 이스파한 금속 노동자들

지난주 이란에서 살인적인 국가 탄압에 맞서 3일 동안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이 시위는 운동의 목표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 줬다.

사람들은 크고 작은 도시 최소 62곳에서 거리로 나와 2019년의 대중 항쟁을 기렸다. 그리고 9주차에 접어든 이 새로운 운동이 거리에서 밀려나지 않고 저항하고 있음을 보여 주기도 했다.

이란 수도 테헤란 곳곳에서 촬영된 여러 영상을 보면, 불타는 바리케이드로 도로를 막고 밤낮없이 거리에서 구호를 외치는 대규모 시위대가 등장한다. 시위대가 테헤란의 여러 지하철역으로 행진해 들어가고, 수백 명이 테헤란 번화가에 있는 발리아스르역 역사를 가득 메우기도 했다.

시위대가 이란 북부 도시 베샤르, 쿠르드족 도시 카미야란, 서부 도시 부칸에서 정부 병력과 장시간 시가전을 벌였다는 보도도 있다.

이날 시위는 "총파업"으로 불리기도 했다. 다만, 이는 대체로 소상공인들과 상점 주인들이 해당 기간 동안 영업을 멈춘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이스파한시(市)의 금속 가공 노동자들이 3일 내내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운동의 핵심인 수십여 대학에서는 시위와 연좌 농성이 벌어져, 캠퍼스 운영과 강의를 중단시켰다. 이란 온라인 언론 아크바르-루즈는 사난다지시(市) 소재 쿠르디스탄대학교에 시위 진압대가 쳐들어와 발포했지만 학생들이 이들을 물리쳤다는 보도가 실렸다.

이번 주 시위 진압대가 시위대에 실탄과 최루탄을 쏘고 시위대를 대거 연행하는 과정에서 수십 명이 사망했다. 연행자는 운동이 시작된 이래 약 1만 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부는 일부에게 사형을 선고하겠다고 위협했다.[현재까지 6명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 역자]

> 이제 9주차에 접어든 이 운동은 거리에서 밀려나지 않으려 저항하고 있으며, 정치적·사회적 자유 확대를 요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결집점 구실을 하고 있다.

3일에 걸친 이번 행동은 이란에서 벌어지는 운동의 패턴을 보여 주는 듯하다.

일정 시기 동안에는 시위가 소규모로 나타난다. 이런 시위들은 각 지역 · 도시의 핵심 활동가 단체들에 의해 유지된다.

그러나 때로는 주도면밀하게 준비되는 대규모 행동의 날이 잡힌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들에 잡히는 이런 행동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가한다. 이런 행동은 운동에 대한 광범한 지지를 보여 준다.

여성에게 히잡 착용을 강요하는 법을 규탄하며 시작된 이 시위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정권 전반에 도전하는 운동이 됐다.

이 법은 정권이 보수적 통치를 정당화하고 집행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법에 맞선 시위는 정치적 · 사회적 자유 확대를 요구하는 모든 사람들(특히 젊은이들)에게 구심점이 됐다.

더 나아가, 2019년의 항쟁을 기리며 열린 이번 시위는 빈곤, 저임금, 물가 급등에 관한 "경제적" 요구들도 내걸었다. 2019년의 시위들은 물가 상승에 항의하며 시작됐지만 곧 정부 퇴진 요구로 번졌다.

그 시위는 지난 몇 년 동안 빈곤 문제로 잇따라 일어난 시위들의 일부였다. 올해 초에도 기초 식품 보조금 삭감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또, 교사들, 석유 수송 노동자들, 정유 노동자들이 만만찮은 파업을 벌어기도 했다.

지금 벌어지는 운동에서 파업은 아직 주요 요소가 아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주요 시위 일정에 맞춰 행동에 나서는 중요한 사례들이 있었다.

11월 15~17일에 이스파한 금속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몇몇 계약직 석유 노동자들과 석유 수송 노동자들이 시위에 맞춰 파업을 벌였다. 하지만 아직은 이런 행동이 주요 노동자 부문으로 확산되지 않았다.

한편, 최근 몇 주 동안 석유화학 노동자들과 제당 공장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였다는 보도도 있다. 정부와 기업주들은 몇몇 노조 간부들을 위협하고 체포하는 것으로 대응했지만, 노동자들에게 일정한 양보를 하기도 했다.

사탕수수 공장 기업주들은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기 하루 전에 체불 임금을 지급했다고 한다.

이란 정권은, 노동자들의 요구가 거리 시위와 온전히 결합되면 안 그래도 끈질긴 이 운동이 더 강력해질 수 있음을 알고 있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832호 / 번역 박이랑

이란 시위의 진정한 성격과 잠재력 – 마르크스주의적 관점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혹심한 국가 탄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 시위를 히잡 착용에 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요구 운동으로 규정하는 보도들이 많다. 그런 보도에서 이 시위는 흔히 '히잡 관련 시위'나 '이란 여성 시위', 또는 '여성 차별' 반대 시위로 불린다.

이 운동은 쿠르드계 이란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도순찰대에 의해 구금됐다가 의문사한 것에 항의하면서 시작됐다. 히잡 착용 자유화나 아미니 사망 진상 규명 등은 여전히 운동의 중요한 요구이다.

그런 점에서는 이란 시위가 여성 차별 반대 시위라는 규정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시위대가 마치 대부분 여성으로 이뤄져 있다는 인상을 주는 "여성 시위"라는 말은 잘못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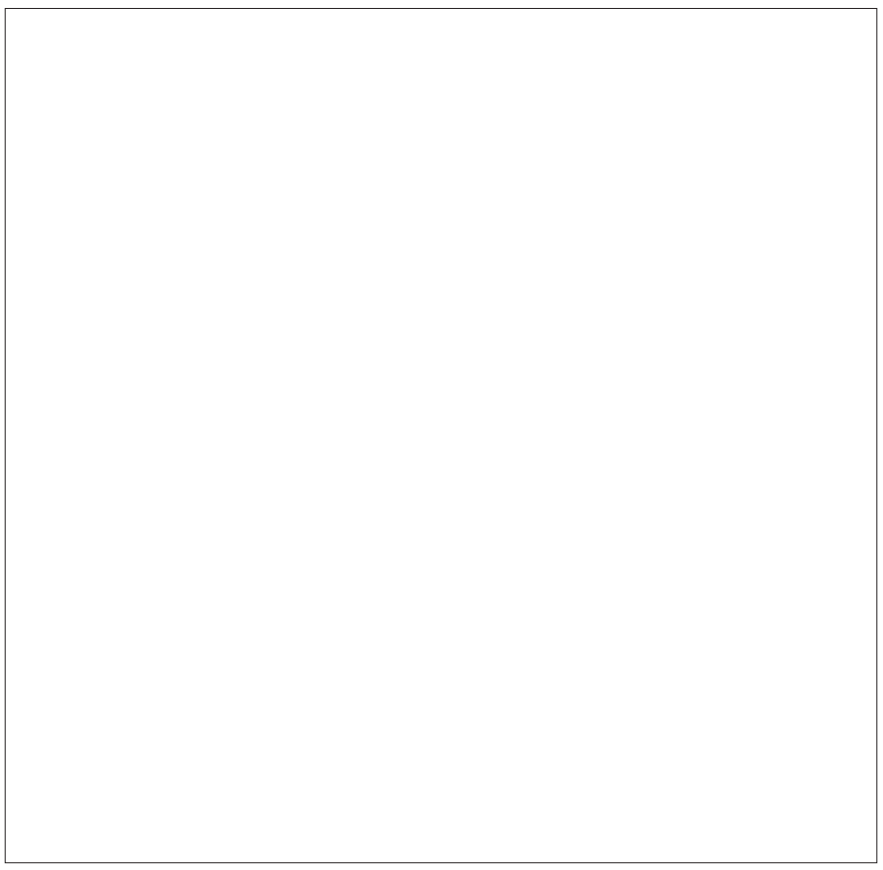
그러나 언론들의 이런 규정은 히잡 착용 자유화 요구가 이란에서 갖는 의미와 이 시위의 잠재력을 온전히 포착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

현재 이란 국가는 1979년 이란 혁명의 격변 속에서 이슬람주의가 부상한 결과로 등장했다. 물론 이란 혁명은 이슬람주의 운동의 산물이 아니라 이란 왕정의 모순이 폭발한 결과였다. 하지만 노동자 운동과 좌파가 자신의 약점과 실책으로 혁명적 대안이 되지 못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슬람주의자들이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다.

이슬람주의 운동은 1941년부터 이란을 통치하던 모함매드 레자 팬흘래비 왕정의 현대화 · 산업화 정책 때문에 주변화되고 몰락하고 있다고 느끼던 일부 성직자들과 중간계급의 정치적 프로젝트였다.

이슬람주의는 부의 분배와 사회 정의를 약속하면서 노동자들과 농민과 도시 빈민들(이들은 농촌의 옛 생활 방식에 강한 유대를 갖고 있었다)에게도 매력을 줬다. 이렇게 이슬람주의자들은 '이슬람 원리'에 따라 사회를 운영한다는 정치적 프로젝트 쪽으로 민중을 결속시켰다.

(이 '이슬람으로 돌아가기'는 기존 사회를 전근대 시대로 되돌리려는 것이라기보다는 개조하려는 것이고, 기존 지배 질서와 서방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을 일부 포함했다.)



아미니 사망 40일, 아미니를 추모하고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 아미니의 묘에 몰려든 이란인들

히잡이 이슬람 전통의 일부이므로 히잡 착용은 현 이란 지배자들이 내세우는 건국 이념의 불가결한 일부이다. 이란 지배자들이 보기에 히잡 착용 자유화 요구는 것은 자신들의 통치 이데올로기를 정면 부정하는 것이다.

통치 근간의 이데올로기

따라서 히잡 착용 자유화는 이란 지배자들이 쉽사리 양보할 수 있는 성격의 요구가 아니다. 현재 이란 국가가 시위를 강경하게 진압하는 까닭이다. 최근 이란 정권은 시위 참가자들에게 사형까지 선고하고 있다.

물론 히잡 단속의 수위는 저항에 밀려 일시적으로 낮아질 수도 있다. 예컨대, 이번 시위가 벌어지자 도시에서는 지도 경찰의 활동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한다.

그러나 히잡 강제 착용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현 이란 국가를 타도하거나, 거의 그런 규모의 거대한 투쟁이 벌어질 때만 실현될 수 있다.

이처럼 히잡 강제 착용이 국가의 건국 이념이자 근본적인 통치 이데올로기와 관련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항의는 권위주의 정치체제 전반에 대한 도전으로 금세 발전했다.

현재 시위대가 권위주의 국가에 맞서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들을 내놓고 있는지는 아직 정식화(定式化)되지 않았다. 그러나 시위의 성격이 히잡 문제를 훌쩍 넘어섰다는 것은 분명하다. 시위의 핵심 기치가 "여성, 삶, 자유"라는 사실도 이를 보여 준다.

이 시위를 대표하는 노래로 자리잡은 '바라예'(위하여)는 여성의 복장에 관한 자기결정권 외에도 "가난한 사람들"과 "쓰레기통을 뒤적이는 아이들," "통제 경제," "더럽혀진 대기," "멸종해 가는 페르시아 표범", "내버려진 아프가니스탄 난민" 등 다양한 사회적 · 정치적 불만을 표현하고 있다.

부침을 겪는 중에도 운동이 꾸준히 이어져 온 곳은 대학 캠퍼스다. 그러나 이 운동은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반향을 얻고 있다. 아직 소수이지만 일부 노동자들은 파업을 하기도 했다. 특히, 정유소의 계약직 노동자들과 교사 노동자들은 시위를 지지하고 탄압에 항의하는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물론 파업이 노동계급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지는 않다. 예컨대, 정유소 계약직 노동자들의 파업은 파업 주동자들이 체포되면서 빠르게 종료됐다. 그리고 석유 산업에 결정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은 투쟁에 나서지 않았다.

현재의 반정부 시위가 정권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투쟁으로 발전하려면 노동계급이 전면적으로 자신의 경제적 권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노동계급의 요구와 투쟁들을 이 시위와 연결시키고 투쟁을 전면화해야 한다.

이는 가능성이 있는 일이다. 파업은 아니었지만 이란 노동자들은 2018년과 2019년에 심각한 생계난을 배경으로 격렬한 시위를 벌인 바 있다. 국가가 노동조합을 통제하는 상황에서도 일부 부문에서 노동자들은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 투쟁과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앞서 언급한 정유소 계약직, 교사 노동자들도 바로 그런 노동자 부문이다.

혁명 전략의 문제

심지어, 이란 시위가 처음 제기한 히잡 착용 자유화 요구를 성취하기 위해서라도 정권 자체를 위협하는 혁명적 투쟁으로 발전해야 하고, 더구나 트로츠키가 말한 연속 혁명의 전략이 필요하다.

제정 러시아에서 활동했던 트로츠키는, 당시 러시아에서 차르 타도 등 민주주의적 과제들을 해결할 능력은 오로지 노동계급이 사회주의적 권력 장악을 할 때만 현실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 투쟁으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노동계급은 자기 자신의 해방, 즉 사회주의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히잡 착용 자유화도 민주주의적 과제의 하나다. 이란의 맥락에서 이것은 마치 다른 세속 국가들에게 하듯이 제기할 수 있는 간단한 요구가 아니다.

이 애초의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서라도 권위주의 국가 자체에 맞서 투쟁해야 하고, 이를 위해 노동계급의 요구와 투쟁과 연결돼야 한다. 이란에서는 이미 그런 가능성을 보여 주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란 시위를 여성 차별 반대 시위로 부각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관점이다. 물론 한국에 있는 우리가 이란 시위를 이러저러하게 규정한다고 해서 이란의 운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적 좌파는 이란 시위가 현실에서 보여 주고 있는 잠재력을 온전하게 평가하며 운동이 성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원웅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solidarity.org/join

workerssolidarity.org

문의: 02-2271-2395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workerssolidarity.org/what-we-stand-for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구독 문의: 02-777-2792, ws@wspaper.org

wspaper.org/subs2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노동자 연대
wspaper_org
@wspaper
노동자연대TV

wspaper.org/online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노동자 연대" 검색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구독하세요

- 다양한 주제의 온라인 토론회 영상
- 주요 시사 이슈 10분 정리
-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보는 중국 시리즈
- 투쟁 취재 영상
- 맑시즘 강연 음원

총 470여 개 콘텐츠

채널 바로가기

구독하시면, 지금 딱 보기 좋은 영상/음원을 추천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명칭: (주)레프트미디어
제호: 노동자 연대 발행연월일/창간호: 2009년 3월 14일
인쇄인: (주)디엠코리아 현재오 등록번호: 서울다08179 (주간)
등록연월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전화: 02-777-2792 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email: ws@wspaper.org

ISSN 2005-8217
9 772005 821003 48

서민 생활고 심화와 불평등 키우는 윤석열 정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노동자 등 서민층의 실질소득이 크게 줄었다.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실질소득 감소는 공식 통계로도 확인된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올해 3사분기에 물가 상승을 감안한 가계의 실질소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퍼센트 감소했다. 특히 노동자(도시근로가구)의 실질소득은 4.7퍼센트 줄었다.

이는 2008년 금융 위기 직후였던 2009년 3분기(3.1퍼센트) 이후 가장 큰 수치다. 평범한 사람들은 금융 위기 수준의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소득 감소 폭은 더욱 크다. 소득 하위 20퍼센트의 실질소득 감소는 6.5퍼센트나 됐다.

지출 항목별로 살펴보면,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의 실질 소비가 12.4퍼센트 줄었다. 고기, 과일, 채소 등 먹거리를 줄여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실질 소득 감소는 물가 인상뿐 아니라 정부 지원 삭감 때문이기도 하다.

올해 3분기 물가가 지난해보다 5.9퍼센트 오르는 동안 근로소득은 5.4퍼센트 오르는 데 그쳐 실질 임금이 삭감됐다.

여기에 정부의 지원을 뜻하는 '공적이전소득'이 26.1퍼센트나 줄었다. 지난해 3분기에 코로나19 국민지원금이 소득 하위 80퍼센트에게 지급됐는데, 올해는 이런 지원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반면 금리 상승으로 이자 비용은 20퍼센트나 올랐다. 네 가구 중 한 가구(25.3퍼센트)가 이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1년 만에 17퍼센트나 늘어났다. 소득 하위 20퍼센트는 10가구 중 6가구가 적자이다.

긴축 정책

그런데도 정부는 긴축 정책으로 서민의 생활고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내년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겨우 4.1퍼센트 늘어났다. 물가상승률보다 낮고, 고령화에 따른 자동 증가분을 고려하면 큰 폭으로 삭감된 것이다.

특히 공공 지원을 축소하고 민간 기업들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기조는 열악한 복지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대표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5조 6000억 원이나 삭감됐다. 반면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자 정부는 종부세 등 부동산 세금 감면을 추진하며 집값 띄우기에 여념이 없다.

코로나19를 거치며 공공의료의 열악한 현실이 드러났는데도 내년 공공의료 확충 예산은 61퍼센트나 삭감됐다. 반면 민간 병원과 보험사, 기업들에게 돈벌이 기회를 늘려 주는 의료 민영화에는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공 어린이집 예산, 초등돌봄 예산, 공공 요양시설 예산 등도 대폭 삭감됐다.

한전과 가스공사 등의 적자를 핑계로 전기·가스·수도 요금도 대폭 올렸다. 올해 10월 전기·가스·수도 요금 인상률은 23.1퍼센트나 돼, 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겼다.

정부는 재정 적자와 공기업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런 긴축 조처가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기업주와 부자들에게 막대한 감세 혜택을 주려는 것을 보면 이런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정부는 법인세·소득세·종부세를 대규모로 감면해 주려 한다. 정부는 그 규모가 13조 원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60조 원에 이른다. 명지대 우석진 교수는 자연증가분까지 고려하면 그 규모가 25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정부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하지만, 상위 0.01퍼센트 대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정책 등을 추진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것이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가 서민 생활고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임기 초반부터 지지율이 하락한 중요한 배경이다. 노동자 등 서민에게 경제 위기 고통을 떠넘기려는 공격을 수월하게 하려고 권위주의적 통치도 강화하려 한다. 그런 우선순위에 따른 경찰력 배치(집회 통제, 마약 단속 우선 등)는 이태원 참사를 낳은 원인이기도 하다.

이런 악행에 대한 반감으로 윤석열 퇴진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또 생계비 위기에 맞서며 화물연대 등 노동자들이 투쟁을 벌이고 있다.

윤석열 퇴진 운동과 노동자 투쟁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함께 전진한다면 생계비 위기에 맞서 노동자 등 서민의 삶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을 것이다.

11월 12일 전국노동자대회

정선영 사진 이미진

화물연대 파업

생계비 위기에 대한 광범한 불만을 대표한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경제 지표들은 하나같이 최악을 기록했다. 역사상 가장 큰 폭의 물가 상승률, 1870조 원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가계부채, 2009년 금융 위기 이후 최대치로 감소한 실질소득.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 등 서민층에게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화물 운송 노동자들이 5개월 만에 다시 파업에 나선 것은 바로 이런 벼랑 끝 생계비 위기 상황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극심한 고통을 겪어 왔다. 요소수 가격이 폭등하고 올해 들어 기름값이 사상 최대치로 뛰었다. 그 고통은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됐다. 정부와 사용자들의 비용 전가 속에 화물 노동자들은 매월 200만 원가량 수입이 줄어 생활비가 쪼들리고 빚이 쌓였다.

한때 2000원까지 올랐던 경유가가 약간 내리는 듯싶더니 지난달부터 6주 연속 오름세다. 다시 1880원을 넘어섰다. 요 몇 년 사이 수억 원씩 빚을 내어 노후 차량을 교체한 노동자들이 많은데, 금리까지 올라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었다. 하루 평균 14~15시간을 꼬박 일하고도 "생계 걱정에 한숨만 푹푹 나온다"는 불만이 터져나오는 이유다.

그런데도 정부와 사용자들, 보수 언론들은 "힘겨운 경제 더 힘들게 하는 파업," "불법 생떼 파업," "나만 살자는 이기주의" 운운하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사진 박선희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승리하는 게, 서민층의 삶을 보호하고 윤석열의 정치적 위기를 심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윤석열은 사법 처리와 화물차 면허 취소까지 협박했다.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해 달라(안전운임제)는 노동자들의 외침을 깔아뭉개고 탄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자신이 5개월 전에 화물연대와 한 약속(안전운임제 지속, 품목 확대 논의)조차 헌신짝처럼 내동댕이치면서 말이다. 생존 위기에 놓인 대중의 고통을 대하는 윤석열의 기본 자세다.

윤석열의 강경 대응 기조는, 물론 이번 파업이 경제적 · 정치적 파장을 일으켜 대중의 분노에 불을 붙이고 정부의 위기를 재촉할 수 있다는 깊은 위기감의 반영이다. 화물 노동자들이 "국가 물류를 볼모로 사실상 정권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의 비난이 대변하는 바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경제 위기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런데도 정부와 사용자들은 작심하고 노동자들의 삶을 파탄 내야 '경제'(기업 이윤)가 산다고 말하는 것이다.

화물연대는 윤석열 집권 초인 지난 6월 고유가 고통전가에 맞서 물류를 멈춰 세웠다. 기업들의 이윤이 크게 타격을 받아 정부가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할 만큼 첨예한 정치 쟁점이 됐다.

윤석열 지지율도 타격을 입었다. 노동자 투쟁이 생계비 위기의 대안임을 보여 준 것이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은 그때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을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파업 때 정부가 화물연대에 너무 밀렸다"(〈중앙일보〉)면서 설욕을 다짐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더 크게 표출되고, 퇴진 운동이 10만 명까지 규모를 늘리며 커지고 있다.

이처럼 정부에 대한 반감이 큰 상황은 노동자 투쟁이 더 폭넓은 대중의 지지를 받고 연대를 구축할 잠재력이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 투쟁이 만만찮게 벌어진다면 윤석열은 더한층의 정치적 위기에 몰릴 수 있다. 광범한 대중이 고물가 ·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만큼, 그것을 대변하는 투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감을 얻고 행동에 나설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화물 노동자 투쟁이 승리하도록 연대하고 지지해야 할 이유다.

박설

화물 노동자가 파업 이유를 말한다

권영한
수출입 컨테이너 운송, 화물연대 대전지역본부 한국타이어지회 조합원

"물가와 기름값이 폭등해서 힘듭니다. (정부가 지급하는) 유가보조금도 345원 하던 것이 지금은 172원으로 두 배나 떨어졌어요.

윤활유, 타이어, 세차 비용, 부품비, 정비 공임료 모두 연쇄적으로 올랐습니다. 오르지 않은 게 없어요. 미쉐린 타이어만 해도 한 개에 48만 원 하던 것이 이제는 76만 원으로 올랐어요.

전기세, 가스비까지 물가도 많이 올랐잖아요.

안전운임제 적용을 받아도 이런데, 과거의 운임체계로 돌아가면 버텨 낼 사람이 없습니다.

구속을 각오해서라도 우리의 최저생계를 위해 안전운임제 일몰제가 폐지되고, 전 차종 · 품목에 걸쳐서 소외됐던 노동자들도 적용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연대가 20년간 줄기차게 요구해 온 것입니다. 인간답게 살아 보겠다는 의지들이 강합니다.

이번 투쟁은 정부와의 투쟁입니다. 윤석열이 직접 나서 화물연대를 불법단체로 매도하고, "법과 원칙"대로 대응한다고 하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는 무역협회 등 화주(기업주)들 얘기만 듣고 있어요. 자본의 이윤을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려는 겁니다.

이태원 참사도, 민주주의나 외교 등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모든 게 문제입니다. 노동 정책에서도 자본가 편만 들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는 지지율이 10퍼센트가 돼도 (달리는) 기차처럼 갈 것 같아요.

노동자들, 서민들은 계속 어려움에 빠질 것입니다. 윤석열이 '자유' 운운하는 것도 그들만의 자유일 뿐이에요.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켜야 합니다."

더 많은 인터뷰는 본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 정리 안우춘

노동자 연대
wspaper.org
Workers' Solidarity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독자 · 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을
정기구독/후원하세요
wspaper.org/subs2

화물연대 파업 정당하다

화물 운송 노동자들이 11월 24일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윤석열 정부와 사용자들이 고유가 · 고물가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6월 초에도 8일간의 파업으로 물류를 멈춰 세웠다. 이는 집권 초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등 정치적 효과를 냈다.

그 결과 정부는 '안전운임제 유지 ·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은 그 합의를 뒤집으려 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일종의 최저임금 제도다. 법상으론 올해 말로 제도가 종료된다.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은 주요 항만, 컨테이너 기지, 제철소 · 시멘트 · 정유 · 자동차 공장 등 전국 주요 물류 거점에서 투쟁하고 있다.

유가 상승으로 심각한 생계비 위기 겪고 있는 화물 노동자들. 11월 24일 의왕에서 열린 파업 출정식 박진희

파업 첫날부터 물류 차질이 일부 빚어졌다. 현대제철 포항공장은 하루 출하량 8000톤 전부를 내보내지 못했다. 일부 시멘트 공장에서도 출하량이 줄었다.

위협

정부와 기업주들, 친기업 언론들은 이런 물류 차질이 산업 전반으로 확대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그래서 파업 전부터 노동자들을 맹비난하며 탄압을 준비했다.

윤석열이 그 대열의 맨 앞에 섰다. 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윤석열과 국토부 장관 원희룡은 업무개시명령을 내려서 파업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긴급 당정협의회, 관계장관회의가 잇따라 열렸다. 국무총리 한덕수는 화물연대 파업이 "민생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성장 동력의 불씨를 꺼뜨리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윤석열이 말하는 법치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이태원 참사의 비극에서 잘 드러났다.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 집회 통제를 우선하느라 평범한 사람들의 안전을 내팽개쳤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윤석열이 말하는 '법과 원칙'은 기업주들의 이윤을 우선하느라 화물 노동자 파업을 탄압하고 고통을 전가하려는 것이다.

화물연대 파업이 "민생 경제를 위협한다"는 비난도 터무니없다. 윤석열 정부가 걱정하는 "민생"은 노동자 등 서민층의 삶이 아니라, 기업주들의 이윤일 뿐이다.

생활고

화물 노동자들은 지금 심각한 생활고에 내몰려 있다. 고유가 · 고물가로 허리가 휘는데 최근 경기 후퇴로 물량까지 줄어 매달 수백만 원씩 소득이 감소했다.

그래서 최소한의 안정적 생계를 위해 안전운임제가 필요하다. 안전운임제는 현행법상 화물 노동자 일부에게만, 그것도 올해 말까지만 시행하도록 돼 있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를 영속 유지하고(일몰제 폐지), 적용 차종 · 품목을 확대하라고 요구하는 이유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스스로 한 6월 합의조차 뒤집으며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정부 · 여당은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마치 통 큰 양보라도 되는 양 말했지만, 노동자들의 바람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다.

화물 노동자의 90퍼센트 이상이 안전운임제를 적용받지 못해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심지어 정부 · 여당은 기존의 안전운임제를 개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 김정재는 23일 개악 법안을 발의했다가 당일 철회했다가 다음날 내용을 슬쩍 바꿔 재발의했다.

언론들은 마치 개악 내용을 철회한 것처럼 말했지만 진실은 다르다. 원안에 있던 원청 기업주 책임을 삭제하는 조항은 빠졌지만, 운임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항목에서 인건비, 대기시간 등을 없앴다. 운송료를 낮추기 위한 독소 조항을 남겨둔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합의 번복을 비판했다. 그러나 5개월 전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 주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했던 민주당은 "여야 합의와 조율"을 말하며 김을 빼 왔다.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을 5개에 한해서 늘리겠다고 했다가 3개로 하겠다고 하는 등 후퇴도 거듭했다.

잠재력

화물 노동자들은 국가 경제의 대동맥과 같은 물류 산업을 파업과 봉쇄 투쟁으로 멈춰 세울 힘이 있다. 대중의 생활고가 심각한 상황에서 연대를 모을 잠재력도 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정부는 군대와 정부 차량을 동원해 대체수송을 지원하고 경찰병력을 동원해 봉쇄 투쟁을 막아 서고 있다. 윤석열은 특히 화물 노동자들의 봉쇄 투쟁을 "동료 괴롭히기", "타인의 자유를 짓밟는 폭력 행위"라고 거품을 물었다.

그러나 주요 항만과 공장 등 물류 거점을 봉쇄하는 대체수송 저지는 화물 노동자들이 전통적으로 해 온 효과적인 투쟁 방식이다. 파업은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뭉쳐서 해당 기업 · 산업을 멈춰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사용자와 정부를 압박 · 강제할 노동자들의 힘은 거기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대체수송 저지는 동료 괴롭히기이기는커녕 단결을 위한 전술이다. 안전운임제 지속 · 확대 요구는 화물 노동자 모두의 조건 개선을 위한 것으로, 화물연대 조합원만이 아니라 비조합원들의 오랜 바람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위기 고통 전가에 분노하는 사람들, 우리의 삶과 안전이 망가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 법치 앞세운 탄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적을 상대하고 있다. 화물 노동자들의 파업을 응원한다.

안우춘